

“당정 자중지란으로 추석민심 최악”

민주 신영대 의원 “전통시장 찾아보니 상인들 ‘물가 너무 올라 어렵다’ 호소 尹정부 서민정책보다 부자감세 등 펼쳐… 민생 잘 챙겨달라는 조연도 들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이 12일 KBS전주 제1라디오 ‘패트럴 전북’에서 “선거를 이긴 집권 여당은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대통령을 뒷받침해야 하는데 오히려 당이 혼란스럽고 정부도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내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산조선소가 올해 10월에 조기 가동하게 되어 기쁘다”는 칭찬과 격려도 들었다고 전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경우, 지난 21대 총선 당시 신영대 의원이 의원직을 걸고 재가동을 공약한 바 있다. 신영대 의원은 입법, 예산, 정부 부처와 기업과의 협조를 이끌어내 지난해 문재인 전 대통령 참석 하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협약식을 이뤄냈고, 당초 2023년 1월 재가동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올해 10월 조기 재가

동이 앞당겨졌다. 또한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주요 당직과 관련 ‘특보단장에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갑)이, 수석대변인에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임명돼 당 지도부에 중요한 자리에 전북 의원이 포함돼서 다행이다’라는 안도를 하면서도 “당의 주요 직책을 맡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을 만나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주요 상임위 상임위 간사, 예결위 등에서 힘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군산 희망뉴스를 끄는 질문에 신 의원은 군산지역으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군산전북대명

원 건립, 군산항 제2준설 투기장 예타조사 통과를 전북지역으로 하이퍼트브 종합시험센터 및 청소년센터 건립 공모 선정을 꼽았다.

아울러 하반기 기대할 만한 사업으로 여야 협치로 이루어야 할 전북 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로 신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법과 관련해 전북 의원들이 다함께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고, 명칭만 특별자치도인 것이 아니라 지위만큼 자치권한의 확대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지난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됐다”며 “정기국회 과정에서 민생제일, ‘국민우선’ 기조로 임하고 전북이 발전할 수 있는 예산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경수 기자

20대 대선 ‘흑색선전’ 난무

검찰, 구속 12명 포함 선거사범 2001명 입건 이재명·최재형 의원 등 정치인 불구속 기소

검찰이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 2001명(구속 1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878명이 입건된 것과 비교하면 127.9%가 증가한 수치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변화된 사법시스템 하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됐으며,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의해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12일 대검찰청은 이번 대선 선거사범 수사를 진행한 결과, 공소시효 만료일이었던 지난 9일까지 총 2001명을 입건해 609명을 기소하고 그 중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정치인으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등이 있었으며 유튜버 등도 다수 포함됐다.

이 대표의 경우 대선 선거 과정에서 국정감사 혹은 방송사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비선거운동 기간에 학생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문 전 대통령 내외를 모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극우성향 유튜버 안정권(43)씨 사례도 있었다.

19대 대선 대비 입건 인원은 127.9%(878명→2001명) 증가했

으며, 구속인원은 25%(18명→12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 810명(40.5%), 폭력선거사범 389명(19.4%), 금품선거사범(5.1%), 기타 701명(35.0%)으로 집계됐다.

특히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사범의 경우 지난 대선(164명)에 비해 이번 대선(810명)의 비중이 393.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이번 대선사범 수사에서도 검·경이 최선을 다해 협력체치를 진행했으나 변화된 사법시스템 하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6개월 단기 공소시효의 마지막 1개월동안 한꺼번에 300여 명의 선거사범이 검찰에 송치되거나 불송치 기록송부됐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해 검찰에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검찰에서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1차 불기소 종결한 사건에 합의 인정 가능성이 있어 재수사를 요청하더라도 결과가 통보받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공소시효 임박의 문제점도 드러났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사범 6개월 단기 공소시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거사범 입건단계부터 종국처분까지 검·경 협력체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뉴스

‘익산형 여성가족정책’ 발굴에 발 벗고 나섰다

익산시의회, 연구용역 보고회

익산시의회가 익산시 여성가족정책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나아가 익산시의 지역환경과 특성에 부합하는 익산형 여성가족정책을 발굴하는데 발 벗고 나섰다.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여성가족정책 연구회(대표의원 한동연)는 최근 연구단체 회원들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시 여성가족정책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익산시 지역사회 현황 및 여건분석 △익산시 여성가족정책 추진 현황과 평가 △익산시 여성가족정책 수요분석 △익산시 여성가족정책 발전방안 등 익산형 여성가족정책 발굴을 위한 로드맵 구상계획이 보고되었다.

이번 용역의 시행사는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전문가 심층 인터뷰, 중간·완료보고회, 주민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11월 익산형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영역별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제시할 예정이다.

연구단체 대표인 한동연 의원(익산시의회 부의장)은 “익산시의 지역환경 및 특성에 부합하는 실질적이고 실천 가능한 익산시 여성가족정책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변 연구활동의 목적이다”며 “여성친화도시 전국 제1호 도시로서의 위상을 재정립 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올해 추석 민심은” 조장식(사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석민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등급 속인 호텔, 최근 5년간 148곳”

국힘 이용호 의원

코로나19를 계기로 호캉스가 새로운 여가 문화로 정착되고 있는 가운데, 호텔 등급표지를 사실과 다르게 부착한 호텔이 최근 5년간 140여 곳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호텔 등급 하위 부착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인터넷이나 어플상 등급표지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호텔 등급표지 허위부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등급표지를 허위로 부착해 적발된 호텔은 총 148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7년 26건 △2018년 39건 △2019년 36건 △2020년 17건 △2021년 30건으로, 지난 2020년에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A호텔은 관광박은 등급이 없었음에도 ‘3성’ 등급으로 부처해 시정명령을 받았고, 비슷한 시기 경기 안산에 위치한 B호텔 역시 등급이 없었음에도 ‘3성’으로 부처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9년에는 외국계 C호텔이 등급이 없었으나 ‘특2등급(4성)’으로 허위부처해 표지를 제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호캉스 시대에 호텔 등급을 의미하는 ‘별의 갯수’는 단순히 호텔수준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소비자의 여가시간 만족도를 좌우하는 정보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기자

정경심 전 교수, 형집행정지 불허 약 3주만에 재신청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정경심 전 중앙대학교 교수가 검찰에 형집행을 멈춰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검찰의 불허 결정 약 3주만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은 연휴 직전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약 한 달만에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형집행정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 지휘에 의해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됐을 때 형집행정지를 한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달 1일 정 전 교수의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보존치료와 절대적 안정을 위해 검찰에 형집행

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1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불허를 결정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심의위원회는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 제출 자료, 현장감사(임검) 결과, 의료지원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불허 이후 정 전 교수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해 “상태가 몹시 안 좋다”며 휴식시간을 자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공판 과정에서 정 전 교수는 피고인척에 없던리는 등 허리 부위 고통을 호소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확정 받았다. /뉴스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